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V·I·P 신흥시장 소개

경제 이슈: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퇴직연금

이슈: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

- 국내에도 지속가능 위험지자체 등장 가능하다!

세심록

꿈, 또 다른 혁신의 연결고리

Book Review

2030 에너지전쟁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주택보급률은 114.2%, 1인당 주거공간은 24.9㎡로 증가세

-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을 보면, 주택보급률과 1인당 주거공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11년 114.2%로 2005년 105.9%, 2010년 112.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거공간도 2010년 기준 주택당 83.4㎡, 가구당 67.4㎡, 1인당 24.9㎡로 2005년의 83.3㎡, 66.4㎡, 22.9㎡에서 소폭 늘어남
- 특히, 1인당 주거면적은 주택 면적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가구당 가구원 수가 꾸준히 축소되면서 늘어났음

○ 금융 동향: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움직임과 차이나 리스크 등으로 큰 폭 하락

- 미국 버냉키 FRB의장의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언급과 중국 제조업 부진에 따른 자금 경색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 환율 등도 동반 약세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월 13일 2.82%에서 6월 30일 현재 3.12%로 0.3%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 혼란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확대되면서 6월 13일 1,132.5원에서 6월 30일 현재 1,163.5원으로 31.0원 상승
- 코스피 지수도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선진국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6월 13일 1,882.7에서 6월 24일 1,799.0으로 급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6/13	6/24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p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7	1.8	-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2	1.0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2	3.0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39.7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82	3.12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32.5	1,163.5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882.7	1,799.0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6월 13일은 4월, 6월 24일은 5월 수치임.

□ 산업 이슈: V·I·P² 신흥시장 소개:

- 인도네시아의 5대 성장 동력 (요약)

○ 국가 개요

-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群島) 국가
 - 아세안(ASEAN) 10 개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 규모는 세계 4 위
- 2009년 재선에 승리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으로도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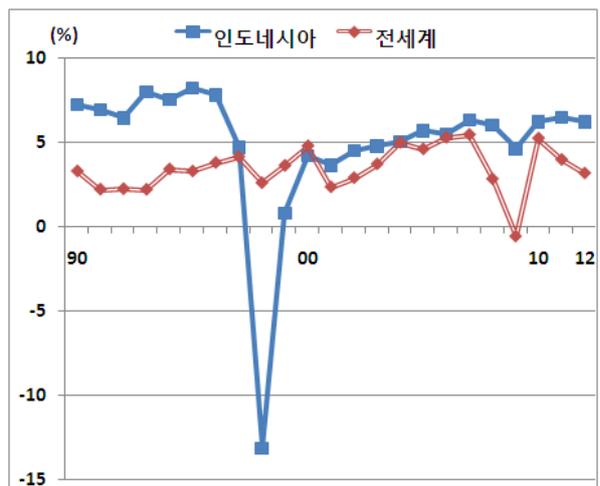
○ 경제 및 산업 동향

-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지속
 - 아시아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90 년~2012 년까지 지속적으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
- (산업) 인도네시아는 산업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편
 -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을 6 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중점산업을 육성할 예정

< 국가 개요 >

면적	1,904 천 km ² (한반도의 8.5 배)
수도	자카르타(1,200 만명)
인구	2 억 5,116 만명(세계 4 위)
민족	자바족(41%), 순다족(15%) 등 300 여 종족
종교	이슬람교(86%), 개신교(6%), 가톨릭(3%)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언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통화단위	루피아(Rupiah)
환율	9,360 루피아/달러 (연평균)
GDP	8,782 억 달러(한국의 76%)
1 인당 GDP	3,590 달러(구매력기준 4,640 달러)

<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CIA, 수출입은행, IMF, KOTRA.

주: 2012년 기준(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11년 기준).

2 2011 년 11 월 일본의 경제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주목할 만한 신흥국으로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을 언급하며 앞 글자를 따서 VIP 시장이라 명명함.

○ 인도네시아의 5대 성장 동력

① (노동력)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수준

- 생산 가능 인구는 1억 6,170만 명, 근로자 임금은 중국보다 낮은 수준

② (도시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 기회

- 도시화율은 2011년 50.7%에서 2050년에는 72.1%에 도달할 전망
- 이로 인해 전기·통신 등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③ (중산층) 빈곤층의 감소와 중산층의 증가

- 빈곤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

④ (자원)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업자원 보유

- 주석, 니켈 등의 광물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팜오일, 코코아 등 농업자원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 차지

⑤ (투자)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인한 고정투자 증가

- 고정투자는 2004년 이후 연평균 24.9%의 빠른 증가율을 기록 중이고, 고정투자의 바탕이 되는 대규모의 자본은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음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교류 및 시사점

- (현황)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 및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1980년 이후 연평균 11.7%(수출 12.1%, 수입 11.5%)씩 성장
- 한국은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약 67억 달러(투자 규모 순위 8위)를 투자하였고, 투자액의 66%는 2005년 이후 발생

- (시사점)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개발,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고려

- 대규모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기지로서의 활용 방안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산층을 겨냥한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에 동시에 주목
-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시장이나 인프라 건설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 요구

□ 경제 이슈: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 2013년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

- 지표 경기 개선 속 체감 경기 악화 : 지표 경기가 2012년 3/4분기 전기대비 0% 성장 이후 2013년 1/4분기 0.8%로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3/4분기 4.6% 증가에서 2013년 1/4분기 0.3% 증가로 위축되며 체감 경기는 악화
- 수출 회복 부진에도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 :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수출 회복세는 미약. 하지만 수입도 감소하여 2013년 1/4분기 무역수지는 2012년 1/4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축소형 무역수지 흑자' 양상을 보임
-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하락 : 신규 취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이 2012년 1/4분기 3.8%에서 2013년 1/4분기 3.6%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고용률은 동 기간 중 57.7%로 하락
- 저물가 기조 하에 물가 불안 심리 가중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연평균 3.0%에 근접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불안 심리는 높음
- 넘쳐나는 유동성, 높은 변동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

○ 2013년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 미국 출구전략 시행 본격화 : 미국의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 금리정상화, 주택담보부증권 매각의 3단계로 진행. 하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시행. 하지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에반스틀로 판단하면 2단계 금리정상화는 시기가 이르다. 양적완화 축소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화 강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금리는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수출품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대미 수출은 호조 기대.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상품 가격 하락은 수입 원가 절감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작용

- 일본 아메노믹스 실패(아베게돈) 우려 : 일본 경제는 2%대 중후반대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나, 금리 상승, 양적완화의 부작용, 실물경기 회복 지연, 아베내각 추동력 약화 등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아메노믹스가 실패로 끝날 우려도 있음. 이로 인해 일본 경기 재침체시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로 한국 수출 경기는 물론 내수 부진세가 지속되는 등 내외수 동반 침체로 경기 급락 우려
- 글로벌 수출 시장 급랭(유럽 경기 추가 침체·중국 경착륙) : 유럽 경제는 재정 긴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침체되는 등 실물 부문의 추가 침체가 지속될 전망. 이로 인한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중국 경제는 중소기업 경기 약화, 지방부채 부실화 우려 상존으로 경착륙 우려가 확대됨. 중국 경기 부진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
- 가계부채 버블 붕괴 : 가계부채는 하반기에 통화당국의 통화 완화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빠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큼. 가계 부채 버블 붕괴는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
-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 :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인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말 종료되면,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거래절벽'이 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으로 건설산업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고용과 서민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축소되어,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

○ 정책 과제

- 2013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적으로 5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리스크 요인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메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시장 급랭,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회복 부진 등이다.
-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고,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리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해야 한다. 추경 예산 및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내수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 하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고려하되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가계의 연체 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국민행복기금 활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3년 4.1 종합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신속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더하여 기본세율의 추가 인하 등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생애최초 구입'을 포함한 실수요자로 확대하고 면제 시기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으로 민간 건설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 이슈: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

- 국내에도 지속가능 위험지자체 등장 가능하다!

○ 국내 기초 지자체 인구 고령화 심화

최근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로 볼 때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기초 지자체를 기준으로 고령화 정도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230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45%인 103곳이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중 7% 이상)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14% 이상)로 진입한 곳도 47곳으로 전체의 20.4%에 이른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기초 지자체도 73곳에 달해 전체의 약 32%에 해당한다.

○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 추정

국내 기초지자체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면서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 기초 지자체가 차세대 확보를 통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기능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지속가능위험지자체와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지자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속가능위험지자체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0% 이상으로, 인구구조 상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확보가 곤란한 지자체를 말한다. 지속가능곤란지자체란 전체 인구 대비 55세 인구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현재로는 지속가능하나 점차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되고 있는 지자체이다. 지속가능지자체는 전체 인구 55세 미만 인구 비중이 50% 이상으로 인구구조상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는 곳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현재 국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극히 일부인 2곳의 도내 군지역이 지속가능곤란지자체로 나타나 국내 기초 지자체들은 현재 지속가능지자체 상태이다. 둘째,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광역시와 도에서 2015년 이후에나 발생할 전망이다. 국내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2016~202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모는 3곳으로 매우 소수이다. 셋째,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2012~2015년 사이에 도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겨날 것이다. 국내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2012~2015년까지 전체 기초 지자체의 약 4%인 9곳으로, 모두 도내 기초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넷째, 2015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도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등장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2016~2020년 사이에 총 4개의 기초 지자체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화될 것이다. 다섯째, 2012~2020년 사이에 전체 230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4.8%인 34곳이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도내 지자체가 3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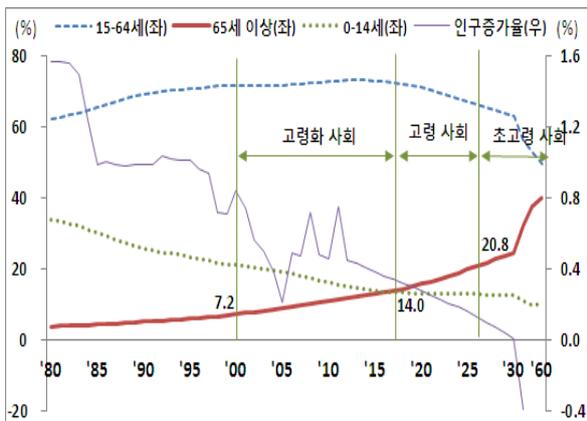
현재, 국내 230개 기초 지자체들은 거의 모두 지속가능지자체에 속하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시·군·구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방의 중·장기 재정 규율을 확립, 이를 기준으로 점진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방 고유의 전통산업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양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한 지역 생산성 확대 노력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모색이 필요하다.

□ 국내 기초 지자체 인구 고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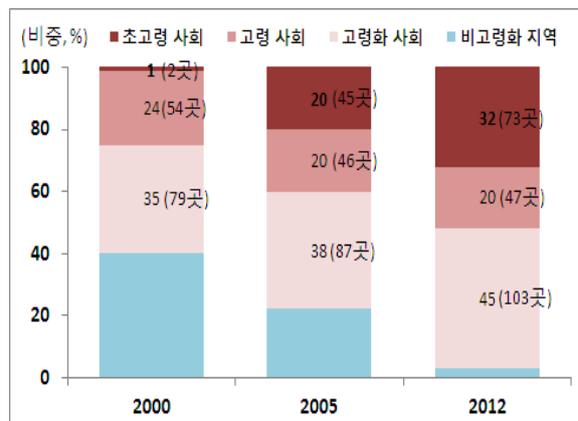
○ 최근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로 볼 때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 UN(United Nation)의 고령화 판단 기준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 이상 비중이 2000년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
- 2017년에는 동 14%에 달해 고령 사회, 2026년에는 동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
- 기초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인구구조 상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음
- 2012년 현재, 국내 지자체 가운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곳은 전체의 45%인 103곳에 이르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자체는 20.4%인 47곳으로 나타남
-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자체도 지난 2000년 1곳에 불과했으나, 2012년 현재 전체 230개 지자체 중 약 32%인 73곳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인구 고령화 전망 >



< 국내 지자체의 인구 고령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UN 기준에 따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를 의미.

□ 국내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 추정

1) 국내 지속가능위험지자체 추정 방법

○ (국내 지자체 구분) 국내 기초 지자체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시·군·구와 도 내 시·군을 합한 총 230 개 시·군·구로 분류

- 국내 기초 지자체 분류³
 - 수도권 지역은 서울이 25 개 구, 경기 31 개 시·군, 인천 10 개 군·구 등 총 66 개 시·군·구로 분류
 - 광역시는 부산, 대구 등 5 개 지역 내 군·구 39 개로 분류, 도는 강원, 충북 등 8 개 지역 내 125 개 시·군으로 구분
 - 전체적으로는 시·군·구는 시 76 곳, 군 85 곳, 구 69 곳 등 총 230 개 기초 지자체로 분류

○ (추정 방법) 수도권, 광역시, 도 등 3 개 권역의 총 230 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5 년간 연령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2013~2020년까지 국내 각 기초 지자체의 연령별 인구 규모를 각 지자체의 연령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먼저 추정한 후, 각 지자체별 전체 인구 대비 55세 이상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산출하여 도출⁴

< 인구 고령화를 기준으로 한 지속가능위험지자체 기준 >

구분	정의	의미
지속가능 위험지자체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50% 이상	-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확보가 곤란한 지자체
지속가능 곤란지자체	- 전체 인구 대비 5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0% 이상	- 현재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가 확보되어 있으나, 점차 차세대 비중이 낮아지면서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되고 있는 지자체
지속가능 지자체	- 전체 인구 대비 55세 미만 인구 비중이 50% 이상	-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가 확보된 상태

주 : 大野 晃, 『山村環境社会学序説現代山村の限界集落化と流域共同管理』, 農産漁村文化協會, 2005年 등의 개념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정·적용함.

3 마산, 진해, 창원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창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당진군은 당진시로 승격되어 당진시를 기준으로 추정. 연기군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연기군 자료를 2012년은 세종특별자치시 자료를 이용. 단, 도내 시에 귀속된 29개 구는 분류에서 제외함.

4 단, 인구 이동, 출생 및 사망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추정과정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한계지자체의 개념

- 한계지자체는 인구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지자체를 말함
- 오오노 아키라(大野 晃, 2005)에 따르면 한계지자체는 5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한계지자체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0% 이상인 지자체
 - 한계지자체 수준을 넘어서면 초한계지자체, 소멸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으나 특별한 기준은 없음⁵
 - 일본의 한계지자체는 2000 년 기준 코치현(高知縣)의 1 개 촌(村)⁶ 에 불과하나, 2015년에는 51 개 지자체, 2030년에는 144 개 지자체로 증가할 전망⁷
-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2007)에 따르면, 전체 62,273개 시정촌(市町村) 가운데, 한계지자체는 총 7,878개로 전체의 12.7%를 차지⁸
 - 더욱이 10 년 뒤에 소멸되거나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라는 지자체가 각각 423 개, 2,220 개로 약 4.3%에 달함

< 일본의 한계지자체의 구분 >

구분	정의	의미
존속지자체	- 전체 인구 대비 55 세 미만 인구 비중이 50% 이상	- 차세대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 지자체의 기능을 차세대로 승계할 수 있는 지자체
준한계지자체	- 전체 인구 대비 55 세 이상 인구 비중 50% 이상	- 현재는 지자체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나, 차세대 확보가 곤란하여 한계지자체 예비군인 지자체
한계지자체	- 전체 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인구 비중 50% 이상	- 고령화 진전으로 지자체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지자체

자료 : 大野 晃, 『山村環境社会学序説現代山村の限界集落化と流域共同管理』, 農産漁村文化協會, 2005年 등.
 주 : 원 구분은 지자체가 아니라 '집락'이나, 국내 행정구역 구분에 맞춰 지자체로 바꿔 표기.

5 일본 총무성은 초한계집락을 위기적 집락으로 칭하고, 65 세 이상 인구 비중이 70% 이상으로 정의. 이 가운데 가구수가 9 개 이하인 지역은 특히 위기가 높은 집락으로 구분.
 6 일본의 기초지자체는 시정촌(市町村)으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촌'임.
 7 일본 농림수산성(2006) 조사에 따르면 '무주화위험집락' 수가 1,403 개로 집계됨. 日本 農林水産省 農村開発企画委員会, 「限界集落における集落機能の実体などの関する調査」, 2006年 3月.
 8 日本 国土交通省, 「国土形成計画策定のための集落の状況に関する現況把握調査(図表編)」, 2007年 8月.

2) 지속가능위험지자체 현황

○ 2012 년 현재 국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극히 일부 지자체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도달

- 국내 기초 지자체 중 극히 일부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
 -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도달한 지자체는 도에 속하는 2 곳의 군지역에 불과
 - 다만, 55 세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근접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도권 내 시 군 1 곳, 도내 시군 41 곳 등 총 42 곳으로 전체 230 개 시군구의 18%에 이릅니다

< 55 세 이상 인구 비중별 기초 지자체 수(2012 년 기준) >

구분	수도권			광역시			도		계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50% 이상	0	0	0	0	0	0	0	2	2
40% 이상	0	1	0	0	0	0	1	40	42

자료 : 안전행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3) 지속가능위험지자체 전망

○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광역시와 도에서 2015 년 이후 발생

- 국내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2016~2020년 사이에 총 3곳으로 추정
 - 국내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2016~2020 년 사이에 광역시에서 2 개 지자체, 도에서 1 개 지자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2012~2015 년 사이에 도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2012~2015년까지 전체 기초 지자체의 약 4%인 9곳으로 전망됨
 - 이들 지자체는 모두 도에 속하는 기초 지자체들임

○ 2015 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도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등장

- 수도권의 경우, 2016~2020년 사이에 총 4개의 기초 지자체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

○ 2012~2020 년 사이에 전체 230 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4.8%가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될 것으로 추정

- 도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곤란지자체 급증
 - 도내 기초 지자체의 경우, 2012~2015 년에 지속가능곤란지자체에 속하는 곳은 9 개에 불과했으나, 2016~2020 년 사이에 21 곳으로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증가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
 - 2012~2020 년까지 도내 전체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총 30 곳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지속가능곤란지자체의 88.2% 수준임
 - 한편, 이는 도 전체 125 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24%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도가 인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속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위험지자체 및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전망 >

구분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위험지자체			
	수도권	광역시	도	계	수도권	광역시	도	계
2012~2015	0	0	9	9	0	0	0	0
2016~2020	4	0	21	25	0	2	1	3
계	4	0	30	34	0	2	1	3

□ 시사점

○ 향후 국내 지자체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방 자치 단체별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첫째, 인구 고령화 심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대책 마련 시급
 - 지자체별 고령화 심화에 따른 미래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지원, 생활의 활력 창출 등 맞춤형 대책 마련 확충 필요
- 둘째, 지방의 중장기 재정 규율을 확립, 이를 기준으로 점진적인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이 필요
 - 고령화가 빠른 지역의 경우, 향후 지방 재정 운영의 부담 가중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별 개인 소득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노인 복지지출 산정 등으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모색
- 셋째,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지방 고유의 전통산업 발굴 및 육성 필요
 -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역 고유 특화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범위 확대
- 넷째, 양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한 지역 생산성 확대 필요
 - 은퇴 고령자들의 질적 노하우를 선별, 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지역 생산성 확대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다섯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 필요
 - 지역별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노인요양시설, 실버 헬스케어타운 등 실버산업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위주로 먼저 특성화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 (02-2072-6225, hzz72@hri.co.kr)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02-2072-6306, leebuh@hri.co.kr)

□ 洗心錄

□ 꿈, 또 다른 혁신의 연결고리

많은 예술가들이 꿈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예술 작품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예술 분야뿐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꿈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러시아의 과학자 드미트리 멘델레프는 원자의 무게에 따라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통해 원소주기율표를 작성했다. 시냅스의 억제 행동 이론을 생각해낸 존 에클스 역시 꿈속의 영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여, 이를 통해 노벨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다. 이렇듯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꿈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꿈이 억제된 무의식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프로이트가 주장하지만, 사실 꿈의 역할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일 수 있다. 꿈은 과학적 탐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많은 뇌과학자들이 뇌 속의 뉴런들의 새로운 결합을 가지고 실험을 함으로써 꿈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바그너는 숫자 실험을 행한 다음 문제를 앞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이 피험자가 숨겨진 법칙을 알아내는 능력을 2배 이상 높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잠을 자는 동안 정신이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퍼즐을 푸는 해법을 일깨워주었고, 처음 훈련할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과학은 아직 꿈의 역할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꿈의 역할이 혼란스럽게 보이더라도 생산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두뇌의 혼돈 상태는 새로운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고 변화된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인 셈이다.

우리는 가끔씩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며칠 밤을 새워도 해결되는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다. 만약 당신이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면 조용히 잠을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혹시 아는가 꿈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困(학연후지부족 교연후지곤)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고, 가르쳐 본 뒤에야 막혔던 것을 알게 된다.

- 『예기(禮記)』의 ‘학기’(學記)편 -

□ Book Review

□ 도서 및 저자 소개

- 제목: 2030 에너지전쟁

- 저자: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

-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강의
-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이사, IHS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협회 회장, 미국 에너지자문위원회 위원장, 미국의 전략적 에너지 연구를 위한 에너지 전담 부서 대표, 메사추세츠 기술에너지계 획연구소의 자문위원, <이코노미스트> 대표 베테랑 기자이자 혁신전문가
- 저서 : 《흩어진 평화(Shattered Peace)》, 《에너지의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 《황금의 샘(The Prize: : The Epic Quest for Oil, Money, and Power)》, 《2010 러시아》, 《커맨딩하이츠(The Commanding Heights)》

□ 주요 내용

- (개요) 인류가 에너지로부터 받은 보상과 그로 인해 확보한 입지, 그리고 그 입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달리고 있는 에너지에 관한 내용
 - 현대의 에너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기후와 탄소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에너지가 장차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석유의 신세계) 세계는 석유를 쟁탈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며, 중국과 미국은 석유를 매개로 한 공통의 관심사가 많음
 - 새롭고 중요한 매장량을 찾아내는 사업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주요국가 및 주요 석유회사, 가스회사들도 '카스피해'와 같은 유전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함
 -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필요한 석유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 이 두 나라가 소비하는 석유의 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35%를 차지
 - 석유 시장이 안정되고, 교역과 투자가 개방되고 에너지 안보가 보장되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음

- **(공급물량 확보)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비재래형 석유, 천연가스 등이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
 - 피크오일(Peak oil)이라는 석유고갈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됨
 - 유정을 통해 나오는 전통적인 개념의 석유가 아닌 오일샌드(oil sands), 오일셰일(oil shale), 타이트오일(tight oil) 등 비재래형 석유의 비중은 커질 것임
 - 또한 셰일가스의 공급량은 20년 내에 천연가스의 50%에 도달하게 될 전망

- **(전기시대) 에너지 안보와 물리적 안전, 경제, 환경, 탄소와 기후변화, 가치관과 공공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이 발생**
 -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의 선택 문제는 에너지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인류의 역사적 숙제

- **(기후와 탄소)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규제 노력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투자를 자극하며 수많은 기술적 연구를 촉발**
 - 1988년 발족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4차 평가보고서(2005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90%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새로운 에너지) 주요 국가와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전력 그리드에 연결시켜 소비자에게 보내는 시스템 설치 비용, 생산량에 일관성이 없는 단속성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미래로 가는 길) 20세기 석유시대의 탄화수소 인간(Hydrocarbon man)에서 바이오 연료 시대의 탄수화물 인간(Carbohydrate man)으로 진화**
 - 굴착하는 연료시대가 물러가고 경작하는 연료시대가 도래할 가능성 큼

- **(맺는 말) 우리는 지금 에너지의 '위대한 혁명'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의 창의력**
 -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 전환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에너지, 특히 증기기관을 장악했기 때문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